

## 금융개혁과 중국의 정치경제

조운제 | 서강대학교 교수

**리** 커창 중국총리는 지난 9월 11일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중국이 금융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리에 금융개혁안을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다. 지난해 세계은행과 함께 <China 2030>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금년 봄 새 지도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실무진에서 새 지도부가 추진할 개혁정책들을 준비하면서 금융개혁을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왔다. 필자도 이러한 준비과정에 외부조언자로서 참여해 자문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 자신이 밝힌 대로 “경제체제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며 금융개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개혁의 가장 깊은 단계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중국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정당한 것이다. 가장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타분야와 깊이 얽혀있어 기술적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고, 가장 어려운 단계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 사회, 경제적 저항과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하는 말이다.

사실 그가 언급한 대로 금융개혁은 경제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은 것이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실물경제의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어왔지만 여기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난 수

세계 속의 한국경제 길잡이

**IGE** [www.igenet.com](http://www.igenet.com)

자료문의 세계경제연구원(IGE)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전화 02-551-3334~7 팩스 02-551-3339

년간 중국은 높은 신용팽창과 투자율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다. 자본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노동공급증가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은행대출이 집중되어 있는 국유기업과 은행대출에 대한 접근도가 낮은 중소기업 간 자본생산성에 큰 격차가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지속적인 소득과 부의 분배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금융기회의 확대가 경제, 사회적 불균형 완화에 불가결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금융부문은 양적 규모로 볼 때 이미 선진국의 수준에 달해 있다. 은행저축 규모는 GDP의 150%가 넘고, 이는 독일(117%), 한국(7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민간부문에 대한 여신 규모도 비슷하다. 서유럽과 캐나다, 호주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물론 중국의 금융부문에서 은행이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저축, 대출 규모에 있어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자산 규모 면에서 세계 10대 은행 중 중국은행이 4개나 포함된 것이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금융은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리가 규제되고 정부가 은행의 여신 규모뿐 아니라 여신 행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구성에 있어서도 아직 은행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비은행금융기관(NBFIs), 채권시장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정부가 직접 금리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발전이나 채권이나 주식을 다루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발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의 은행의존도가 매우 높고, 은행대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출 배분의 효율성,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 편향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치금융’이 아직도 중국의 금융부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보듯이 관치금융은 금융자원을 경제성장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특히 상업적 관점에서 대출을 꺼리게 되는 인프라 건설,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은행대출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경제개발 초기에 성장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도 이러한 관치금융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관치금융의 지속은 결국 금융시장의 효율화, 다변화를 저해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자본배분의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바로 중국경제가 이러한 과정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유화는 매우 복잡한 설계를 요하고 그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효과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금융부문의 변화는 경제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또한 금융부문이 변화하려면 실물, 재정, 외환 등 연관된 모든 분야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듯이 중국의 금융 분야는 재정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 수행하

고 있는 면이 많다. 정책금융 공급뿐 아니라 경기대책도 결국 은행의 대출창구 지도를 통해 이뤄져 왔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2009~10년 정부가 은행들을 독려해 인프라 건설과 지방정부 사업을 지원하며 막대한 신용 팽창을 통해 고성장을 유지해온 것이 좋은 예다. 따라서 금융자유화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세수확보의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기업부문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동안 저금리 대출의 집중적인 혜택을 받아온 국유기업들은 금리가 자유화되고 차입비용이 올라갈 경우 지금과 같은 높은 부채, 투자확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경영과 재무구조도 따라서 변해줘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금융자유화는 기업부실의 증가, 금융부실, 경제 위축과 같은 어려운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 금융자유화는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모험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금 금융개혁을 미루고 있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는 소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부외거래(off-balance sheet transaction)를 통한 그림자금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있고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지만 중국 그림자금융의 특징은 금리규제와 높은 법정지불준비금, 그리고 정부의 여신개입을 회피하기 위해 빠르게 확대되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 거품과 지방정부 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하자 소위 WMP(Wealth Management Product)라는 새로운 부외거래 상품을 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여 이들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그림자금융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산의 구성과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래 부실채권을 확대시킬 위험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이러한 빠른 그림자금융의 확산은 결국 금리규제, 높은 지불준비율, 그리고 직접적인 여신규제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다루지 않고는 결국 중국 금융부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시 말해, 최근 중국 금융부문의 발전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금융의 안전성을 관리하려는 의도가 실질적으로 금융부문의 안정성을 더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 지도부가 추구하고 있는 '현대적이며, 조화롭고, 창의적 사회(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society)'를 이루기 위해서도 금융부문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심화된 빈부격차, 지역격차, 그리고 부패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정치, 사회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세계금융위기를 맞으며 글로벌경제 불균형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수출신장이 둔화되면서 내수확대와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을 기해야 할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그동안 크게 낮게 책정되어온 예금금리를 시장균형 수준에 근접하도록 만들어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생겼다. 또한 생산활동인구의 감소로 더 이상 투자와 노동투입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에 의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다양한 금융기관과 증권시장의 발전을 통해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창의성을 뒷받침해 전반적

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도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금융개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해서 바로 개혁과 자유화가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금융개혁은 실로 엄청난 과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도전과 과제의 핵심은 바로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적인 것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금융개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국의 현황으로 볼 때 금융부문 개혁은 한두 개의 대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크게는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금융에서의 정부의 역할부터, 작게는 금융감독기관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제들이 서로 깊이 연계되어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금융기관의 소유자이자 감독자이며 금융부문의 룰(rule)을 정하고 심판도 하는 모순적 입장을 안고 있다. 금리자유화, 은행의 상업성 제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발전, 주식과 채권시장의 활성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 금융감독기능의 개편 등은 그 자체가 만만한 과제가 아닐뿐더러 이 모든 정책과제들이 서로 깊이 얽혀있다.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떤 한 분야의 실질적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가령 금리자유화의 문제를 보자. 그동안 중국정부는 거의 모든 금리를 통제해 왔으나 최근에 대출금리의 하한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현재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금리규제는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 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예금금리의 규제는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금리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국채의 약 65%, 정책금융기관 채권의 약 80%, 회사채의 약 30%를 은행들이 인수,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자금 수요의 약 75%를 은행대출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의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는 국채, 공공채, 회사채, 은행대출 금리 등 전반적 금리수준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채의 금리는 공식적으로는 자율화되어 있지만 발행시장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규제로 실제로 금리가 낮게 결정되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 채권이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다. 회사채 시장도 정부가 공급물량을 직접 규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중국 금융개혁의 핵심은 예금금리 자유화와 금융기관의 상업성 제고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반 위에 채권과 주식시장이 발전할 수 있고, 비은행금융기관들이 성장하여 금융시장의 다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시장의 개방과 실질적인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를 위해서는 동시에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의 중앙은행(인민은행)은 그동안 주로 통화총량 규제와 대출규제,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조정을 통해 유동성 관리를 해왔다. 만약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려면 통화당국은 간접통화관리방식을 통해 시중금

리수준과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즉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을 통해 콜금리와 같은 정책금리(policy rate) 목표를 관리하고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금리자유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현재 20%를 넘는 높은 지준율을 낮추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같이 높은 지준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세네갈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와 브라질 정도 밖에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급준비율은 0~5%에 지나지 않는다. 높은 지준율은 실제로 은행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금리규제를 통해 높은 예대마진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준율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막대한 외환시장 개입 때문이었다. 중국은 그동안 외환시장 개입으로 지금 약 3.4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쌓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 GDP의 약 절반으로 미국 GDP의 20%를 넘는 막대한 수준이다.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유입에 따른 환율절상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외환을 매입함에 따라 통화공급이 크게 늘고 인플레이 압력이 높아져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통화안정채권의 발행만으로는 부족해 지준율의 인상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향후 금리를 자유화함과 동시에 기업부실을 막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준율을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축소가 필수적이다. 이는 다시 정부가 환율의 변동성 확대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은 수출신장을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나 금리자유화는 이러한 성장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수용해야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중국의 임금수준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위안화의 절상은 수출경쟁력의 빠른 하락과 일자리 창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금융개혁에 있어 또 다른 큰 난관은 바로 국유화된 은행과 기업이다. 금리자유화의 가장 큰 목표는 시장금리에 의해 자본배분이 결정되도록 하여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이 상업적 기반에 의해 운영되고 또한 기업들의 차입과 투자행위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국유기업들은 소위 국가의 묵시적 보증으로 경성예산구속(hard budget constraint)으로부터 자유로울 뿐 아니라 방만한 차입과 투자를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해 있다. 은행들도 국유기업이 추진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수익성보다 국유기업이란 자체만으로 대출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금리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여신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국 금융자유화의 한계이다. 또한 정부가 은행의 주인인 상황에서 은행의 상업적 운용과 엄격한 금융감독이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금리자유화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결국 은행의 상업화, 그리고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 이후 중국정부는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지속하면서 해외 전략적 투자자에게 은행지분의 일부를 팔고, 주식시장, 이사회 구성 개편 등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실질적으

로 상업화에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민영화 없이는 상업화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의 민영화는 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다. 중국은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 (socialist market economy)' 체제를 표방하여 왔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중국에서 생산시설의 국유화와 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해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공산당 조직위는 모든 국유은행·기업의 경영진을 임명해 왔으며 공산당 지배엘리트들이 이러한 요직을 차지하여 왔다. 국유기업·은행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권력기반이며 엘리트들의 지배체제에 대한 충성을 담보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영화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기반을 뿌리 채 흔들 수밖에 없다. 공산당 내 엘리트, 국유기업 경영진뿐 아니라 규제를 맡아온 정부 내의 저항이 막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의 금융개혁은 몇몇 정책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체제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야말로 가장 깊은 단계의 체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금융개혁을 중국정부는 과연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 구조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금융개혁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반면 종합적, 구조적 접근을 하게 되면 중국의 지배체제(governance structure)와 경제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중국의 정부, 학계, 그리고 금융계 모두 금융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새 지도자들이 얼마만큼이나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금융개혁안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금년 11월 열리게 되는 공산당 중앙위의 제3차 전체회의(삼중전회)에서 보다 구체적 개혁안이 발표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경제가 되었다. 중국의 국유기업, 국유은행 역시 규모 면에서 세계최대의 반열에 올라섰다. 중국의 자본시장이 언제까지나 폐쇄되어 있을 수는 없다. 국제사회에서의 힘과 주도권은 실물경제의 규모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없이 세계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국지도부도 수년 전부터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금리의 자유화, 환율정책의 유연화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 국내금융 자유화가 제대로 자라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시장원리에 의한 운용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배구조가 변해야 하며,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길은 민영화를 추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금융개혁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이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일시적으로 상당한 간격을 가질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 중국은 지금 금융개혁이라는, 과거 추진해온 경제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이 진정한 금융개혁에 성공하면

국가지배체제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만약 지금의 국가지배체제를 유지하려면 진정한 금융개혁에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과거 어느 사회주의 경제체제도 선진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시장경제체제에 따른 보상유인체계(incentive structure)의 도입 없이는 효율성과 생산성,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경제는 향후 어떤 경로를 밟아가게 될 것인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금융부문의 근본적 개혁을 해나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활력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이제 금융개혁이라는 가장 핵심적 개혁을 피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내 정치·경제 안정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세계문제의 전면에 주도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세계 정치·경제·안보 문제의 중심에 나서려면 금융개혁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 막중한 과제를 중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중국과 세계가 걸어갈 미래 지평이 달라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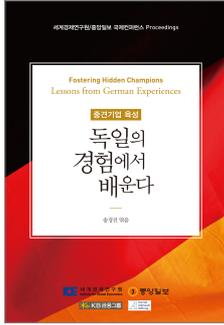
조윤제(趙潤濟, Yoon-je Cho)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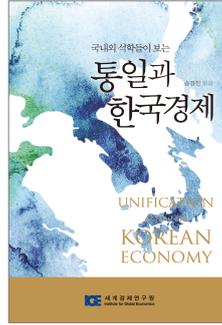
#### 필자 약력

- 1952년 출생
- 1976년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1984년 스탠퍼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1984~1988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경제분석관
- 1989~1992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분석관
- 1992~1993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경제분석관
- 1995년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 1995~1996년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 1996년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 1998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자문교수
- 1999년 국제금융센터 운영위원
- 2000년 기획재정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 2003~2004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 2005~2008년駐영국대사관 대사

# 2013년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중견기업 육성  
독일의 경험에서 배운다



국내의 석학들이 보는  
통일과 한국경제

- |                                                     |                                              |
|-----------------------------------------------------|----------------------------------------------|
| · 2013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 전망                               | Allen Sinai                                  |
| · 유로존, 올해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 Guntram B. Wolff                             |
| · 유럽국채위기: 과제와 해결책<br>세계경제, 언제 회복되나?                 | Andreas Dombret<br>John Lipsky               |
| · 미국과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br>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외교정책                | David Hale<br>Hugh Patrick/Gerald Curtis     |
| ·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br>아베노믹스와 일본경제의 미래, 그리고 TPP          | Guy Sorman<br>Yukiko Fukagawa/Jeffrey Schott |
| · 통일 독일의 경제·정치적 위상: 한국에 대한 시사점<br>외국인이 바라본 중국의 경제정책 | Karl-Heinz Paqué<br>Bob Davis                |

##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IGE MEMBERSHIP GUIDE



- 1 구좌당 연 1,000만원 (중소기업 연 50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 1 구좌당 연 50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제공



- 1 구좌당 연 5만원
- 연구원 주최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발간 간행물 이메일 서비스

※ 모든 후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가입 문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호



T 02-551-3334~7  
F 02-551-3339  
E-mail [igenet@igenet.com](mailto:igenet@igenet.com)  
<http://www.igenet.com>